

헌법재판관이 주문 읽는 즉시 ‘尹 파면 vs 복귀’ 효력 발생

현재, 4일尹 탄핵심판 선고

비상계엄 사태 123일째 되는 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파면 시 오는 6월 3일 안으로 대선
만장일치 경우 요지 설명 후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현재가 발표한 선고 일자지는 4일로, 12·3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현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안이 현재로 넘어온 이후, 현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1~2월 사이 11차례 변

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 가졌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한 차례를 빼놓고는 매번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후 변론 당시에도 계엄은 정당했으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현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한 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의혹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재판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설, 5대3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 등이 여론의 불안을 자극했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만일 기각·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112일간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된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들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심판은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AI 간담회’서 민생행보… 野, 광화문서 ‘마은혁 임명’ 촉구

국민의힘, 서울AI허브 방문

“AI 지원 예산 2조 이상 협의 중”
민주당 “韓 권한대행, 마지막 경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간담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행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를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주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해성 에어스메티컬 대표 등 AI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면서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과 민간 투자 규모 역시 선도국과 비교해 큰 격차가 있다. 글로벌 AI에 뒤처지지 않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주도의 LLM(거대 언어모델) 개발,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AI 생태계의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AI 산업 위치를 현재 글로벌 6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빅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AI 지원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현장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 ▲국내 미성숙한 AI 시장 ▲막대한 개발 비용 ▲훌륭한 인재 육성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CTO는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를 만나봤을 때,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국 정

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유명 스타트업은 이미 받고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광화문 정부중합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한을 4월 1일로 못박아놓고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현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

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정 봉기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과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오늘부터 본회의 열려…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합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尹 선고기일 지정에 표결 미지수

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 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

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오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

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

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리었다.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현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박태홍 기자